
 국토교통부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8. 1. 3(수) 총 3매(본문 2)	
담당 부서	공공주택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홍목, 사무관 김종욱 • ☎ (044) 201-4580, 4511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부, '공공임대 실적 부풀리기 의혹' 보도 관련

- 전세임대주택의 공공임대주택 해당 여부
 -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제7호*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 - *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(轉貸)하는 공공임대주택
 - 전세임대주택은 국가의 지원(95% 주택도시기금 용자 지원)을 받아 공급되며, 전세임대주택 물색 등 과정에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(LH공사 등)의 행정적 지원*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 - * 전세임대 BANK, 공인중개사·법무사 지원, 1:1 지원 등('17.3월~)

-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구하고 정부는 전세금만 지원하므로 금융대출 지원이라는 내용 관련
 - 전세임대주택 제도 도입 초기('05년)에는 세입자의 매물 확보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으나,
 - 현재는 전세임대 BANK 제도 및 1:1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입주대상자에게 계약가능 주택을 안내하고 있고,
 - 주택물색을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소개·안내하며, 계약과정에서 법무사가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입주대상자를 대신해 LH 공사 등에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- 따라서, 전세임대 제도는 전세보증금 용자 지원뿐만 아니라, 주택 탐색, 계약, 생활지원 등 전반에 걸쳐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.
- 정부는 전세임대 BANK 등 입주대상자의 주택 물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

□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등

- (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도입)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집주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복지로드맵(11.29)에서 밝힌바와 같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 - 8년 이상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집주인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기 거주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, 전세임대 입주자의 거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.
- (건설임대 보완) 현재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평균적으로 5~6년을 거주(20년까지 거주 가능)하고 있어, 타 건설임대에 비해 거주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.
 - 그러나 입주까지 4~5년이 소요되는 건설임대와 달리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, 전용 85m² 이하의 넓은 주택에 거주 가능하며, 본인이 원하는 도심 내 지역에 거주 가능하다는 점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- (주거사다리의 출발점) 시세 대비 30%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므로, 전세임대 거주 후 국민임대 등 타 임대주택으로 주거 상황이 가능하여 주거사다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.

< 보도내용 (내일신문, '17.1.3, 수) >

- ◇ 국토부, 공공임대 실적 '부풀리기' 의혹
 -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대출제도 지원 일종인 '전세임대'가 1/3 차지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김종욱 사무관(☎ 044-201-458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